특집 |

배반당한 '해방': 미군 점령하 '재일조선인 문제'와 냉전, 1945~1948 | 최덕효

투고일자: 2019. 11. 19. | 심사완료일자: 2019. 12. 9. | 게재확정일자: 2019. 12. 20.

이 글은 미국의 재일조선인 정책을 글로벌냉전과 국제인권레짐의 개막이라는 두 가지 국제정치 전개 의 맥락에서 새롭게 검증하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 형성 과정에서는, 미소냉전이라는 대립구조의 출현과 함께 국제인권레짐의 개막이라는 또 다른 국제정치의 전개 역시 동시에 진행 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동아시아의 전후 처리와 냉전구조의 형성 과정 속에 재일조선인 정책을 위치 지으며 논의해 왔다. 이 글은 이 같은 기존의 접근법 위에 전간기(戰間期)에 기원을 둔 전후 국제인권레짐의 형성 과정에 대한 고찰을 더함으로써 보다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함과 동시에, 재일조선인의 '해방'이 놓여 있었던 복합적인 구조와 조건들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전후의 재일조선인 운동은 어떠한 '해방'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일본정부의 구태의연한 지배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냉전구조라는 제약 조건마저 더해지면서 '해방'의 실천이 봉쇄당했다. 그렇다면 전후 국제인권레짐의 개막은 미국의 점령정책을 통해 재일조선인의 '해방'에 어떻게 작용했는가? 이 글은 주로 점령 정책 가운데 재일조선인의 '해방민족' 규정과 민족교육 문제를 고찰하면서, 재일조선인 문제를 보다 넓은 세계사의 맥락에서 논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냉전, 국제인권레짐, 소수민족 문제, 미군정, 재일조선인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동북아시아 비(非)서명국들: 소련, 한국, 중국과 평화조약의 규범 보전 | 김승배

투고일자: 2019. 11. 16. | 심사완료일자: 2019. 12. 4. | 게재확정일자: 2019. 12. 24.

이 글은 일본이 일으킨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정식으로 마감시킨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규정된 명시적 조문과 이로 인해 파생된 규범에 주목한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수반된 규범이란, 전쟁의 종료에 따른 평화의 회복,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수반, 영토 재편, 국제연합헌장의 준수, 냉전이라는 시대성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일본과 당시 평화조약의 비(非)서명국들인 동북아시아 국가들, 즉 소련, 한국, 중국과의 관계성을 거시사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이들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관계성을 검토한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발효로 주권을 회복한 일본은 1956년 소련, 1965년 한국, 1972년 중국과 국교회복 또는 국교정상화를 실현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서명하지 못했던 이러한 국가들은 이미 1945년 이전부터 일본과 역사적, 정치적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탄생한 일본과의 관계 재확립을 위해서는 국교를 맺을 필요성이 있었다. 비록 이들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서명하지 못했지만, 국교정상화를 통해 평화조약의 규범들을 수용하는 형태로 일본

과 관계를 개선했다. 결론적으로 1945년까지의 전쟁을 마무리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냉전 속에서 탄생했고, 동북아 냉전질서를 공고화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렇지만 평화조약 비서명국들과 일본의 국교회복 및 국교정상화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만들었던 규범 속에서 이탈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후 일본의 출범 시점은 냉전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시대에서 제한적인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었지만, 평화조약 비서명국들과의 국교를 통해 일본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규범을 수호하면서 정치적 행동 공간영역을 확대했다. 이는 비서명국들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보전(保全)하게 된 결과이기도 했다.

주제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냉전, 소일 국교회복, 한일 국교정상화, 중일 국교정상화

1950년대의 '특수'(特需)와 냉전구조 | 정진성

투고일자: 2019. 12. 17. | 심사완료일자: 2019. 12. 31. | 게재확정일자: 2020. 1. 5.

한국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등장한 특수는 1950년대를 통하여 일본경제를 규정하는 요인의 하나였다. 특수는 한국전쟁기간 중 연 8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외화획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일본경제의 성장을 촉진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전쟁의 휴전 후에도 한국전쟁특수를 대신할 수 있는 신탁수의 확보가 모색되었다. 그 결과 미국의 대외원조의 역외조달을 활용함으로써, 일본은 1950년대 후반에도 연 4, 5억 달러에 달하는 특수 수입이 가능해졌다. 특수는 외화획득이란 면에서만 아니라 일본의 군수산업 부활의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의 동남아시아 경제진출의 선봉이 되기도 했다.

특수로 인한 일본의 경제적 이득은 일본이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의 냉전구조 속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얻어졌다. 한국전쟁 시 일본은 말 그대로 전쟁의 후방공급기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거액의 특수 수입을 획득했다. 한국전쟁 종료 후의 신탁수확보를 위해 일본 정부와 재계는 미국의 군수조달을 위한 일본 공업생산력의 동원이라는 미국 정부의 구상에 적극 호응하였으며, 강화조약 발효 후에 미국의 대외원조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특수라는 경제적 이득을 확보했다. 미국은 특수라는 경제적 이득을 제공함으로써 냉전구조하 후방기지로서의 일본의 경제력을 육성했다. 특수는 일본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에 있었다. 반면 특수는 한국과 일본 및 미국의 이해관계가 갈라지는 지점에 위치했다. 한국전쟁특수 자체가 한국의 천문학적인 물적·인적 손실을 대가로 하여 발생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부흥특수(미국의 대한원조물자의 일본조달)는 한국 측에서 볼 때 또 다른 형태의 일본경제로의 종속을 의미했다.

주제어: 냉전, 특수(특별수요), 일미경제협력, MSA 원조, 한국전쟁

북일냉전, 1950~1973: 전후처리의 분단구조 | 박정진

투고일자: 2019. 12. 4. | 심사완료일자: 2019. 12. 19. | 게재확정일자: 2020. 1. 2.

북일국교정상화가 한일 간 '65년 체제'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고는 북일관계를 한일 간 전후처리의 역사에 비추어 재검토한다. 분석은 두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 첫째, 한일기본조약체결에 이르는 과정을 북한요인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둘째, '65년 체제'의 규정력이라는 차원에서 70년대 데탕트기 북일관계의 변화를 분석한다. 주된 논점은 북일관계에 대한 냉전의 영향력이 남북한 분단구조를 경유해 현실화되는 과정이다. '한반도 유일 정통성을 둘러싼 남북한 경쟁'이 일본의 전후처리에 어떻게 작용했는가? 본고는 목적이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다.

한일기본조약 제3조가 확정되기까지 반복된 한반도 관할권을 둘러싼 논쟁은 전후처리과정에서 분단이라는 요인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가장 구체적인 사례였다. 일본정부의 입장은 한국의 유일 합법성은 인정하되 북한의 오설리터를 전제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갔다. 청구권과 관할권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65년 체제' 형성 이후 북일관계는 남북관계의 진전 속에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후처리는 후퇴를 거듭했다. 그리고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이 내린 잠정결론은 "경제협력방식"이었다. 한일기본조약의 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65년 체제'의 형성은 한일관계만이 아니라 북일관계의 결과다. 따라서 '65년 체제'의 변화는 '한반도와 일본'이라는 시각에서 재론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와 일본' 전 전후처리의 완결에는 분단 구조가 작동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북일국교정상화는 남북한 평화공존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평화공존에 대한 기여가 통일에 대한 공헌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북일국교정상화는 한일기본조약 제3조의 수정을 반드시 동반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 있어 한국의 배타적 정통성이 부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남북 분단을 제도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모순에 대한 대비는 아직 충분치 않다.

주제어: 한일기본조약, 북일관계, '65년 체제', 일본의 전후처리, 남북한 정통성 경쟁

점령기 일본의 진상 폭로 미디어: 미일 합작의 진실 찾기와 역사 다시 쓰기 | 정지희

투고일자: 2019. 12. 9. | 심사완료일자: 2019. 12. 27. | 게재확정일자: 2020. 1. 6.

이 글은 미군 점령기에 인민사가 간행한 좌파 대중잡지 『진상』을 사례로 삼아, 전후 일본인 자신들에 의한 진상 폭로 붐을 조명한다. 미군정이 전쟁 중 은폐되었던 사실을 제공해 전쟁의 진실을 알린다는 진상 폭로 전략으로 일본인들의 역사관을 '교정'하고 이들을 포섭하려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상』의 사례는 전후 역사관의 교체가 미군정뿐 아니라, 일본 미디어와 오디언스 또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한 미일 합작의 결과였던 점을 분명히 보여 준다. 『진상』은 좌파 입장에서 일본 대중을 계몽하고 선동하려 한 점에서 미군정과 목표를 달리하면서도, 역사적 진실을 객관적인 사실의 은폐와 폭로의 문제로 환원하여 일본인들이 새로운 역사관을 채택하기 쉽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통념이 역사관의 교체가 자연스럽게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기제로 작용했다. 이 글은 이러한 역사적 정황을 드러내어 '미군정 대 일본 미디어·오디언스'라는 이분법적인 도식을 재고한다. 또한 은폐와 폭로, 그리고 역사의 객관성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전후의 단절적인 역사 인식이 냉전적인 사고방식의 자장 안에서 형성되고 유지된 점을 분명히 하여, 냉전을 일방적으로 주어진 틀로 보기보다는 다양한 집단과 개인이 이합집산하며 만들어 낸 일종의 패치워크로서 글로벌 냉전의 역사 경험을 다시 볼 것을 제기한다.

주제어: 냉전, 전후 역사서술, 역사적 사실, 역사수정주의, 미군 점령, 진상 폭로 미디어

히노 아시헤이의 전후 평화주의와 냉전의 심상지리: '반핵평화' 담론을 중심으로 | 김지영

투고일자: 2020. 1. 2. | 심사완료일자: 2020. 1. 9. | 게재확정일자: 2020. 1. 15.

이 글의 목적은 1945년 이후 탈식민화와 냉전체제 구축이 동시에 진행된 아시아에서, 포스트제국과 냉전의 역학이 어떻게 교차하였으며 이는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 담론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를 고찰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가 1950년대에 문화외교의 장에서 발신한 '평화주의'적 메시지가 각각 아시아, 소련,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냉전 상황과 맞

물려 보편주의적 평화주의로 수용되었는지를, 아시아제국회의(The Conference for Asian Countries), 일리아 에렌부르크(Ilya Ehrenburg)의 방일, 미국 시찰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1955년에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아시아제국회의에 참가한 일본대표단은 '서구(제국)-아시아'와 '자유진영-공산진영'의 대립 축이 교차하는 틈새에서 '아시아'의 일원으로 복귀하여 평화주의 외교를 전개하였다. 한편, 1950년대에는 미소 간 핵경쟁이 격화되면서 '유일 피폭국' 일본에 대한 양국의 문화냉전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57년 4월에 일소공동선언에 입각한 양국의 국교 회복 후 첫 문화사절로서 일본을 방문한 일리아 에렌부르크와 함께 나가사키에 동행하고 이듬해(1958년)에는 미국 국무성의 초청을 받아 미국을 시찰한 히노는, 진영 대립에 입각한 미소의 냉전적 폭력에 비판적 목소리를 냄으로써 보편적 '평화주의'에 기반한 전후일본상(像)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전후일본이 문화외교를 통해 평화국가의 실감을 획득해 가는 과정에서 일본제국의 과거는 애매하게 봉인되었다는 점에서, 히노의 평화주의적 담론은 그 성립조건으로서 '냉전'을 내장한 것이었으며, '냉전'이라는 역사적 조건에 기대어 '제국'을 삭제한 냉전서사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히노 아시헤이, 냉전, 평화주의, 아시아제국회의, 일리아 에렌부르크

일본영화 속의 냉전: <세계대전쟁>에서 <모스크바 내 사랑>까지 | 강태웅

투고일자: 2019. 12. 27. | 심사완료일자: 2020. 1. 5. | 게재확정일자: 2020. 1. 16

냉전시대 일본의 상황은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최전선에 있던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는 달랐다. 일본은 소련과 일찌감치 국교를 회복했고, 공산당도 합법적으로 활동했다. 그렇다고 이것이 냉전을 반영한 특정 문화가 일본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이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냉전이라는 맥락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영화들을 재분석함으로써, 일본의 냉전시기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민주주의 진영 내부에서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일본영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양국 간의 첨예한 문제인 원폭 투하는 영화에서 다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일본의 전쟁책임과 미국의 원폭투하라는 주요한 논제를 비껴 갔다. 핵전쟁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위기감이 고조에 달한 1960년대 초반에 제작 상영된 <세계대전쟁>은, 일본이 처한 특수성 때문에 냉전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냉전의 특징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순적 내러티브의 작품으로 완성되었다. 또한 가상의 핵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 피해를 가장 먼저 수용하려는 피해 내셔널리즘이 이 영화에 영향을 주었다. 일본과 소련의 합작영화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나 핵전쟁에 대한 공포를 찾을 수는 없었다. 소련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였고, 일본은 침략국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소년과 여성으로 체현되었다. 이러한 소련과 일본 관계에서 드러나는 특성들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영화와도 공통되었다는 점 또한 찾아낼 수 있었다.

주제어: 냉전, 나가사키의 증, 나가사키의 노래를 잊지 말자, 세계대전쟁, 모스크바 내 사랑, 합작영화, 피해 내셔널리즘

연구논단

근대 일본 여성참정권 운동과 정당정치, 1924~1932: 이치카와 후사에와 '부선희득동맹'의 운동 전략 및 그 변화를 중심으로 | 이은경

투고일자: 2019. 12. 3. | 심사완료일자: 2019. 12. 22. | 게재확정일자: 2020. 1. 2.

이 글은 근대 일본에서 여성운동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여성참정권 운동, 이른바 '부선(婦選, fusen)운동'의 역사를 이치카와 후사에와 그를 중심으로 하는 부선희득동맹(婦選獲得同盟, fusen kakutoku domei)을 중심으로 고찰하려 했다. 종래 부선운동 연구가 주로 '전쟁협력'의 기원을 찾으려는 관심에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이 글은 부선운동의 흐름을 운동의 상대가 되는 당시 일본 정치체제의 변화와 그에 대한 부선운동계의 전략의 수정으로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 그리고 이 미 제1차 세계대전에 협력하여 여성참정권을 획득한 영미의 사례를 학습한 것이 부선운동의 전략 수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근대 일본의 부선운동은 아래와 같은 특수한 환경 속에서 전개되었다. 첫째, 후사에 등은 영미를 비롯한 서양 각국에서 총력전이라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정부에 협력한 대가로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통해 부선운동의 결과를 사실상 '예지'(予知)한 것은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부선운동이 상대해야 하는 것은 정우회(seiyu-kai)와 민정당(minsei-to)이라는 정당과 그들에 의한 정당내각이었지만, 정권의 지속은 짧고 약속은 신뢰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정당정치 존립도 불투명했다. 셋째, 당시 일본은 서양식의 합리적 생활문화를 적극 도입하고 있던 시기로, '생활'에 관한 중앙·지방 정부의 제안은 여성들이 거부하기 힘들거나 심지어 양자가 거부감 없이 연결되는 접점이 되기 쉬웠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부선운동은 정당내각을 상대로 했던 출범 초기 다음과 같은 전략을 택했다. 첫째, 서양의 사례에 대한 학습에 근거하여 — 성공의 확신을 가지고 — 평화적인 방법을 고수했고, 둘째, 대(對)의회운동 즉 대(對)정당 중립주의에 입각한 입법운동(및 선거지원)을 펼쳤으며, 셋째, 부선의 근거로서 남녀평등과 같은 정당성보다 부선의 실현이 가져올 장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넷째, — 이 또한 선행학습의 결과로서 — 부선 획득을 위해서뿐 아니라 실현 후의 미래까지를 염두에 둔 여성 정치교육에 힘을 기울였고, 다섯째, 대중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주요 이슈인 생활·사회문제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했으며, 여섯째, 부선을 위한 여성의 대동단결, 혹은 모든 여성을 아우르기 위한 부선을 지향했다.

그러나 이상의 전략이란 기본적으로 1924년 동맹의 설립 이래 1932년 5·15사건으로 정당내각이 붕괴하고 정당정치가 종말을 맞이하기 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후 정당 정치인이 아닌 군인이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고 정·민 양당이 장악한 의회조차 파시즘과 군부의 압력을 받는 시기가 되자, 동맹도 처음과 같은 방침을 고집할 수는 없었다. 즉, 정당정치가 와해된 이후, 특히 군부와 파시즘이 강력하게 대두하고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정치가 총력전체제 혹은 대정익찬(大政翼贊, taisei-yokusan)체제로 재편될 때, 부선운동의 전략도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뀐 상대(counterpart)에 맞추어 부선운동의 방식을 수정한 결과, 이는 '전쟁협력' 활동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주제어: 부선희득동맹, 이치카와 후사에, 여성참정권 운동, 정당내각, 정우회, 민정당, 만주사변, 5·15 사건

특별기고

동아시아 일본연구자협의회 구축과 운영에 관한 단상 | 박철희

이 글은 2016년 처음으로 구성된 동아시아 일본연구자협의회(East Asian Consortium of Japanese Studies, EACJS, 이하 ‘협의회’)의 구축에 이르게 된 과정과 운영의 기본구상, 그리고 ‘협의회’의 연속 개최에 이른 경위를 기록에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쓴 것이다. 2013년 ‘동아시아 일본연구포럼’ 참가를 계기로 구상하기 시작한 협의회 구상은 2014년 일본 아와지시마에서 열린 동 포럼에서 협의회 제안으로 발전하였고, 2015년 아쓰미재단 세미나에서 구체적인 안으로 제시되었다. 2016년 중국 톈진회의에서 협의회 개최가 공식화되었고 2016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1회 국제 학술대회 개최가 현실화되었다. 그 후 2019년까지 4회에 걸쳐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이어지고 있다.

동 협의회는 국가와 지역의 벽을 넘어선 ‘월경’의 정신하에,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학제적 융합’을 기반으로 차세대를 포함한 일본 연구의 ‘미래 개척’을 기치로 삼고 있다. 몇 가지 조직방식의 혁신이 협의회 탄생에 가능하게 하였다. 한 국가나 지역의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 ‘순환 개최 방식,’ 주최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세션 조직의 ‘자기부담방식,’ 그리고 참가자의 자유 참가를 권유하는 ‘개방형 조직 방식’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협의회의 탄생과 성공적인 운영은 5명의 발기인은 물론 일본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아낌없는 지원에 의해 가능했다.

주제어: 동아시아 일본연구포럼, 동아시아 일본연구자협의회, 네트워크, 아쓰미재단,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국제교류기금